

발 신 : 531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발의 단체

수 신 : 청소년 단체장

일 시 : 2006. 4. 17(월)

1. 귀 기관에 평화와 정의를 기원합니다.

2. 이번 531 지방선거는 10대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전국 선거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법이 제개정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선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지원·원조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분위기를 환기해야 하는 전환적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3. 이에 지역사회에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문화를 창조하고 청소년들이 정책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531지방선거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4. “531지방선거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의 취지와 활동내용에 동의하여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과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1. **참여자격** :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의 취지와 활동내용에 동의하여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시설과 개인

2. **동의서 제출처** :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 준비위

Fax - 02-774-8889 E-mail : 531vote@paran.com

3. **동의서 제출기한** : 1차- 2006. 4. 20(목) 오후 6시 / 2차 - 2006. 4. 23(일) 오후 2시

4. **일정** :

-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 :

2006. 4. 21(금) 오후 2시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

-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발족식 : 2006. 4. 24(월) 오전11시 흥사단 회의실

5. **문의** : 이해정 간사 02-754-7893 한국YMCA전국연맹 /

권혜진 처장 02-743-2511 (사)흥사단교육운동본부 /

지세선 부장 02-2667-056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끝.

<직인생략>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 제안단체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 협의회, 청소년YMCA 전국대표자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사)흥사단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가칭) 제안서

청소년이 참여하면 지역의 희망, 10대가 투표하면 깨끗한 선거

사실,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가장 중요한 삶터입니다.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으며 친구가 있고 무엇보다 그들의 경험과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열되는 입시경쟁은 청소년들의 삶을 자꾸 왜곡시키고 축소시켜서 마치 20세 이후에는 인생이 끝나는 것 처럼 그들의 꿈과 열정마저도 “대학가기”로 한정지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없게 하고 어떤 미래도 계획할 수 없게 합니다. 20살이 넘으면 누구나 “대체”로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뒤떨어지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평가되기도 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홍두식은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 대신 자신을 돌봐주고 키워 준 동네를 떠나지 않고 동네 반장직을 맡아하며 “일당 5만원”으로 “무슨 일”이든 해결해주는 청년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 “홍반장”이 될 수는 없지만 홍반장 처럼 사는 것을 선택하더라도 축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불행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이 동네에 애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함께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도 살만한 지역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기 삶을 가꿀 수 있는 지역사회가 모두에게 행복한 동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10대들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들의 한 표가 그야말로 “소중하고 짜릿한 첫 경험”이 되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거나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부정적인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투표하라고 해야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며 뜻을 같이 하는 사회 구성원들과 투표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가 우리 삶과 동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학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에는 이러한 뜻에 공감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모여서 지방선거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축제로 만들고자 합니다.

1. 활동의 배경

1) 1924, 젊은이들의 정치 불신을 생활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바꾸자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도 및 선거제도에서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19세가 처음으로 전국선거에 투표자로 참여하게 되는 만큼 1924 청소년들에게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선거이다. 수많은 청소년들의 조직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선거연령 1세 하향 조정에 따라서 약 70만의 19세가 새롭게 선거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총선 및 대선 보다 투표율이 낮을 뿐 아니라 20대 초반의 유권자들은 2대 때 보다 3대 지방선거에서 30% 전후의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19세의 투표율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식의 척도가 될 것이며 이후 총선에서 18세 참정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운동의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 20대 초반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이 낮은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정서이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정치 무관심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오히려 정치 문제를 논하는 것이 매우 “존스러운 일”처럼 인식되고 있다. 선출 할 수는 있지만 선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가 불가능하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다음에 뽑아주지 않는 것”뿐이라면 청소년들의 정치 무기력감은 충분히 상상 가능한 것이다. 낙천 낙선 운동은 이러한 무기력감을 조금이라도 상쇄시켜 보고자 자구지책으로 시도되지 않았을까?

게다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선택하여 선관위로부터 허락 받은 몇몇을 제외한 어떤 누구의 선거참여도 철저히 봉쇄하고 있는 선거법 속에서도 금품과 상호비방으로 얼룩지는 선거 분위기는 청소년들에게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실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구조적이며 지속적인 실천과 관심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런데 IMF 이후 불어 닥친 취업대란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사회진출을 온전히 개인의 능력문제로 치부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것도 부족하여 거대한 사회구조와 경쟁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진출과 관련된 사회적 원조와 지원의 부족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20대의 낮은 투표율은 기성 선거문화 및 분위기가 조성하고 있는 정치 혐오감과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생산하고 있는 정치 무기력감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온갖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려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면서 살도록”하는 시스템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정치와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정치를 혐오하면 혐오할 수록 무기력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정치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로 자리 잡아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온당하게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어른들에게 “어려서 뭘 모른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듣더라도 “옳은 것”, “정당한 것”,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선거 분위기를 바꿔 보려는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2) 청소년이 보이는 지역사회를 위한 의제 발굴

이번 민선 4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실시 10년을 돌아보면서 참여와 자치를 기준 삼아 지방자치를 평가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청소년단체들은 10대들의 생활 세계로서 지역사회 및 지역

행정과 지방자치를 평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청소년 육성 의무의 작동 여부를 살펴보고 “청소년이 보이는 지역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적 청소년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며 청소년의 참여는 지역사회에 희망과 비전의 표식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조사연구원의 2004년도 “청소년생활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42.9%가 자기 지역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래에 자기 고향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25.8%에 불과했다. 읍면지역으로 가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서 15.2%의 고등학생만이 미래에 자기 고향에서 거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중소도시 거주 고등학생 중에서는 55.2%, 읍면지역의 고등학생은 4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터인 지역사회를 떠나려고 하는가?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학교, 학원, 도서관, 교통편, 청소년시설 등 지역사회 기본 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모두 높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에는 충분치 못한 하드웨어 이상의 것이 있다.

지역사회에는 일자리도 없고 이성교제를 할 만한 또래 젊은이들도 없으며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남에게 뒤떨어지는 행동이어서 어서 이 곳을 떠나라는 압력을 가하는 문화가 존재하며,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희망주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학교, 가정, 일터에서 한 개인으로써, 지역의 구성원으로써 자기 삶의 결정권을 존중받고 삶의 계획이 가능하며 이 계획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원조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복지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이다.

그렇다고 해서 531 지방선거에 청소년의 참여를 통해서 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자기 삶의 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지역사회가 이제는 “청소년들이 살만한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만들고 이것을 그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청소년들이 살고 싶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 활동으로 형성된 젊은이들이 자치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청소년이 보이는 지역사회 : 청소년이 평화롭게 성장하고 자신을 가꾸며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고 청소년과의 파트너십이 제도화되며 청소년의 참여가 공식화 되는 지역사회, 청소년이 시민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인정받는 지역사회

3) 자기 언어로 풀어내는 10대 정치 활동의 정당성,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10대들의 지역사회 참여

18세 참정권 확보 운동을 벌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10대들이 10대들을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이었다. 18세 참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 문제에 청소년이 어떻게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맞섰다.

한국YMCA가 지난 10월에서 11월에 걸쳐 실시한 “세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10대는 판단력이 약해서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 10대 중 26.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13.1%에 불과했으며 그렇다고 답한 수치는 오히려 20대 이상의 성인들보다 높은 것이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자기 삶을 유지한 결과 스스로의 사고와 논리에 확신이 없으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아직) 의미 없는 존재로 간주하게 된 결과일 것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자신이 처한 상황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그 주장으로 지역사회를 설득하고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본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다.

10대가 자기 목소리로 자기 이야기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목숨을 걸지 않더라도 대규모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 이야기에 귀기울일 수 있으려면 청소년들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있고 청소년 단체의 성인회원과 실무간사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일도 있다.

이번 선거는 청소년법이 새롭게 정비된 이후 첫 번째 지방선거로써 청소년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해야 할 청소년 지원 및 원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며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는 일이며 청소년들 스스로 참여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교육과 치안분야의 자치 및 분권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 스스로 지방 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즉, 10대의 지역사회 참여, 정치 활동의 자유에 대한 자기 정당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서의 기반 마련은 이번 기간 모든 활동의 조직적 목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제를 주장하고 지역사회를 설득하면서 청소년이 함께 살아가야 할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장으로써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의 민주적 역량과 의제 개발 능력, 주장력 및 설득력 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활동의 목표

1) “1924 투표참여 캠페인” 및 “미래 유권자 축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정직한 지역사회 선거문화를 만들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참여한다.

2) 지방자치단체 수준 및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할 청소년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향후 5년간의 지역 청소년 시민사회의 중점 활동 내용 수립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게 한다.

3) 청소년의 생활 세계와 지방 자치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시 행정 및 의회의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3. 조직 구성

▶ 1안

1) 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고문 :

- 공동대표 : 참여단체 대표 및 참여단체 대표들이 위촉한 개인
- 상임공동대표 : 공동대표 중 집행단체 대표들로 구성
- 고문 : 활동 취지 및 배경에 찬동하는 인사

2) 참여 단체 및 인사

- 531 지방선거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3) 집행위원회 :

- 집행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 중 1인 선임
- 참여 단체 및 인사 중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

① 조직 및 기획활동 : 청소년 회원 단체, 청소년 단체, NGO 및 NPO 규합 / 슬로건, 모토 제정

② 정책개발활동 : 10대 과제 개발, 행동강령개발, 실행계획개발

③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활동 : 발대식 또는 포럼 / 기자 간담회, 지역별 연대활동, Y축제, 청협 워크숍 등

▶ 2안

1) 상임공동대표 : 인사 + 청소년대표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으면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회인사 3인 내외 및 청소년단체의 청소년대표

2) 공동대표 : 제안단체 중심(8~10), 제안 단체의 대표로 구성,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을 짐.

3) 집행위원회 :

- 공동대표 단체 + 10개 단체
- 참여단체 중 집행단체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 청소년회원 참여가 가능하며 전국 캠페인 및 발족식 등에서 실무력 지원이 가능한 단체 중심
- 공동대표 중 1인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4) 참여단체

- 531 지방선거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4. 활동 내용

● 중앙 사무국

(1)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 : 2006. 4. 21(금) 오후 2시 한국 YMCA 전국연맹 회의실

(2)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발족식

- 일시 : 2006. 4. 24(월) 오전 11시

- 장소 : 흥사단 강당

- 내용

* 운동본부 발족의 배경 설명

* 선거 참여 방법과 내용에 대한 사업 계획 발표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소년 관련 의제 및 정책 제안

* 발족 선언문 낭독

(3)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대한 청소년 정책 제안

○ 참여 단체 사이트를 통한 기본의제 제안활동을 통해 수립된 청소년 의제를 5. 2(화)에 전국적으로 발표하고 공식 화합.

○ 청소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인정받고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목표 지점으로 삼음

○ 청소년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및 선택사항을 분석

→ 각 후보자들의 공약사항 분석 : 청소년법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이해 정도, 실행가능성과 예산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조사활동(후보자 초청토론회, 공약집 분석 등)

○ 그 이외 청소년의 인권과 평화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의 정책과 활동(조례 제정 등)을 제안하는 다양한 의제 발굴이 요구됨

→ 예> 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청소년의 인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인프라 조성 정책 등

○ 이후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하며 지역사회 청소년활동의 핵심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함.

● 각 지역별 활동 제안

(1) 지역사회 청소년 대표자 연석회의 및 청소년의제 제안 전국 캠페인

○ 청소년 의제 제안 전국 캠페인 : 2006. 5. 12(금) ~ 5.13(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청소년의제 제안 캠페인 실시

○ 동네에서 활동하는 10대들을 정치 과제 수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아서 논의하는 기회로 삼음.

○ 각 지역에서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그룹의 대표자 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함.

○ 각 지역별 의제 및 청소년법을 검토하고 시행정 및 의회 정책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10대 의

제”를 채택하고 각 후보 진영에 제안함.

- 후보 초청토론회 참석하여 청소년 의제를 발의하고 질문함.
- 이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로써 활동의 기반을 조성함.

(2) 1924 투표참여 캠페인

○ 2006. 5. 26(금) ~ 5.27(토) 전국 동시 다발 캠페인 전개

- 1924의 정책과제 도출 → 지역사회 정착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창출
→ 지역에 남는 젊은이는 낙오자라는 지역사회 인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함.

○ 1만9천명 투표선언운동

- ① 만 19세 1만 9천명의 투표선언 운동을 조직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여론을 집중시킨다.
- ② 운동기간 : 5월 1일~5월 30일
- ③ 대상 : 대학생을 비롯한 19세 누구나
- ④ 대학홍보 : 강의실 홍보 / 학내 홍보가관설치
- ⑤ 사이버선언(부재자접수) : 인터넷 신문과 공동 캠페인
- ⑥ 릴레이션언 : 연예인, 유명인 릴레이 선언
- ⑦ 길거리 캠페인 : 대학로, 명동 등
- ⑧ 투표참여 구호공모, 포스터 패러디공모 등등
- ⑨ 이벤트 : 100인의 선언자 모아오면 강의실에 케익, 장미100송이 배달

- ① 5.31지방선거전국대학생연대와 함께 100개 대학 부재자 투표소 설치
- ② 2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운동과 예외조항을 유동성있게 적용
- ③ 대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

○ 1920 festival

- ① 5월 20일 대학로
- ② 공연, 퍼포먼스, 퍼레이드 다양한 형식에 내용을 담아서 집결한다.
- ③ 19세20대의 다양한 요구사항 표현

○ 사이버운동

- ① 인터넷 신문사와 공동으로 19세 투표참여 캠페인
- ② 1만 9천명 선언 실시간 중계 (동영상, 기사, 사이버서명 등)
- ③ 관련기사및 활동 집중 취재

(3) 미래 유권자 축제

- 연석회의를 통해 실행이 가능한 지역에서 5.31에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

5. 추진 일정

- 4. 12(수) 발의 단체 마감
- 4. 20(목) 참여 단체 및 인사 1차 접수
- 4. 21(금) 오후 2시 참여단체 대표자 회의
- 4. 22(토) 참여 단체 및 인사 2차 접수
- 4. 24(월) 오전 11시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 발족식
- 5. 2(화) 청소년 의제 발표
- 5. 12(금) ~ 5.13(토) 전국 청소년 정치 참여 캠페인
- 5. 26(금) ~ 5.27(토) 1924 투표참여캠페인
- 5. 31(수) 전국 미래 유권자 축제

6. 참여 단체 공동과제

- 전국 청소년 정책 제안 캠페인 참여
→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2006. 5. 12(금) ~ 5. 13(토))
- 전국 1924 투표참여 캠페인 참여
→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2006. 5. 26(금) ~ 5. 27(토))
- 대표자 회의 및 발족식 참여(2006. 4. 21(금) 오후2시 및 4. 24(월) 오전 11시)
- 자기 홈페이지에 전국 공동과제 청소년 의제를 게시하고 임시 게시판을 설치하여 회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

〈전국 공통〉 청소년이 보이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과제(안)

청소년들이 자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동네가 누구나 살 만한 지역사회입니다

〈1〉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며 청소년 육성계획은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 단체 및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육성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사결정사항에 청소년의 참여가 공식화되고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ex)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운영 및 청소년 어울마당 등 프로그램 선정에 청소년 평가단 참여
지역의 시민단체나 청소년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구성원 각종 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 청소년들과 토론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위원들이 실천 속에서 지역사회를 학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 활동 내용 등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3〉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상시화하고 현장과 결합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는 민주시민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민주시민의 자세와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4〉 청소년들이 지역 청소년 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역의 청소년 동아리들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기회로써 축제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5〉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급식 조례를 제정하여 결식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무료 급식을 상시화, 제도화 할 뿐 아니라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의무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지역사회 청소년의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정례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7〉 지역사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상시적인 인턴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삶을 지

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성실하게 인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활동을 피드백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습니다.

<8> 일터에서 차별받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인 구조활동을 벌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의 청소년 고용가능 업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단체 및 시민단체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잘 적응하도록 취업교육 및 노동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일할 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 및 지역간 교류활동, 문화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특히 주택단지 안에 설치 될 수련시설에 대해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설이 청소년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의 청소년단체 및 시민단체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특히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문화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가 위촉되어야 하며 그 활동이 정례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발굴하여 추천하고 육성위원회와 지도위원이 청소년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11>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인 학교에서 민주적 공동체가 구현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자율적인 학교생활 규정안 제정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12> 두발규제와 강제적 보충수업, 자율학습, 체벌 등 일류대학 입학이라는 명분으로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교내 비평화적·반인권적 문화들이 자율적이고 평화적이며 인권적 제도와 문화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청소년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13>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8세 참정권 및 피선거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

참 가 동 의 서

청소년이 참여하면 지역의 희망 10대가 투표하면 깨끗한 선거

단체명(혹은 이름)					
단체 대표			연락처 (핸드폰)		
** 개인 참가인 경우에는 단체 대표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실무 담당자	이름		직함		연락처

우리 단체 및 시설(또는 나)은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 의 취지에 찬동하며 활동에 참여하고자 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월 일

단 체 명

단체대표

(인)

531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청소년 운동본부 귀하

수신처 : Fax - 02-774-8889 / E-mail - 531vote@paran.com

/ Tel - 02-754-7893